

보험업감독규정

<목 차>

1.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2.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
3.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 통계분석결과 공시의무 및 보험정보 제공시 개인신용정보 동의여부 확인의무 마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태현수
	담당부서 (과)	보험과		직급	사무관
	국장	최훈		연락처	02-2100-2962
	과장	하주식		이 메 일	hstae@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 제1항, 제7-12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제3호,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고하여 재보험 관련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재보험 관련 감독도 정교화할 필요 ‘15.12월 「재보험관리 모범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재보험 감독과 관련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 특히, IMF 금융안전성평가(FSAP, '19년 예정)에서 국제기구 권고사항의 법규화 여부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7.규제내용	보험사 위험관리조직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할 사항에 재보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 및 변경을 추가 재보험의 관리를 위해 재보험 전략 수립, 문서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		
	9.규제목표	국제수준을 고려하여 재보험사의 위험관리 요건을 필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규제체계는 선진화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해외진출 경쟁력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7. < 신 설 ></u></p> <p>②·③ (생략)</p>	<p>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제7-12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 등 재보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 및 변경</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7-12조의2(재보험의 관리) ① < 신 설 ></u></p> <p>② < 신 설 ></p> <p>③ < 신 설 ></p>	<p><u>제7-12조의2(재보험의 관리)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자본관리계획, 위험관리 기본방침, 사업규모, 위험의 특성, 위험감내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u>② 보험회사는 재보험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류 및 합의내용 등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화(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한 서류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u></p> <p><u>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재보험</u></p>

<p><u>④ < 신 설 ></u></p>	<p><u>위험관리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p> <p><u>④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 재보험계약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관리,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u></p>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고하여 재보험 관련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재보험 관련 감독도 정교화할 필요

○ '15.12월,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비공식 행정지도로 분류되어 폐지됨에 따라 재보험 감독과 관련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

○ 특히, IMF 금융안정성평가(FSAP, '19년 예정)에서 국제기구 권고사항의 법규화 여부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IMF는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에서 제시한 재보험 감독 권고사항(ICP)을 반영하였는지 평가

□ 재보험거래시 준수사항을 보험법규에서 정하지 않고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 반영해 시장자율규제를 유도해 왔으나,

○ 동 모범규준이 폐기된 현재 재보험 관리와 관련된 감독규정이 사실상 전무하여 정부 또는 금융당국의 직접 규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유지안 : 일반적인 위험관리 기준 적용 >

□ 재보험거래시 준수사항을 보험법규에서 정하지 않고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 반영해 시장자율규제를 유도해 왔으나, 동 모범규준이 폐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련 감독 공백 발생

○ 재보험계약 부실화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는 결국 보험계약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국제기구 권고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건전성 감독기준 도입은 불가피

※ (참고) 과거 재보험 부실출재 사례

- ①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 부실 발생('12.8월말 기준, 6,042억원 손실)
 - 재보험 중개사의 위조서류를 사용한 계약 체결, 신용등급도 없고 한국 내 재보험거래 실적도 없는 부적격 재보험사 출재 등이 원인
- ② 휴대폰 재보험금 회수불능 사태('14.5월말 기준, 484억원 손실)
 - 00회사가 휴대폰 보험을 특정 재보험사에 집중 출재(85.6%) ⇨ 대규모 자연 재해로 보험사 유동성이 악화되어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분쟁 발생

< 비규제대안 : 자율적 시행 유도 >

- 금융당국이 재보험 리스크 감독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 도입 없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감독당국이 재보험 관련 리스크에 대해 최소한의 감독기준 및 절차를 마련토록 하였던 바, 전면적인 자율사항으로 할 경우, 국제기준 대비 건전성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 가능

< 규제대안 :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국제적 권고기준(ICP)을 고려하여 국내 시장상황에 맞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 도입
 - ① **(재보험전략 수립의무 도입)** 원수보험사는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위험관리기본방침, 자본관리계획, 리스크 특성 및 위험감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보험 전략을 수립·운영
 - ② **(내부통제기준 마련)**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재보험 전략의 수립 또는 변경시 심의·의결토록 규율
 - ③ **(리스크 관리)** 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유동성 및 건전성 위험,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수시로 평가

- ④ **(유동성 관리)** 재보험 계약 구조·방법 등을 감안하여 재보험금 미지급시 유동성 관리방안을 사전에 마련·운영토록 규제
- ⑤ **(정보관리)** 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보험실적(재보험료(금), 미수금 등) 및 재보험사 신용위험 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 집적·관리 의무 부여

<선택근거>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권고와 관련하여 필요최소한의 감독 기준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재보험금 미지급 등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해, 국내 보험산업 선진화 제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

○ 현 시점에서 볼 때,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에 대한 리스크 분석없이 계약인수 후 재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경향

- 특히, 체계적 위험관리 없이 기업성 보험에 대해 보험위험 상당 부분을 재보험에 출재하는 등 단순 위험전달자로만 역할*
(⇒ 일부 보험사는 외형에 비해 실제 보유 위험은 작아서 보험중개사 역할과 유사)

* 기업성보험(상해보험 제외) 중 재보험 출재 비중 : ('11년)61.7% → ('15)62.7%

* **종목별 보유율(=보유보험료/원수보험료) : (특종)44.9%, (해상)29.5%, (화재)56.5%**
(원수보험사가 인수한 보험물건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율, 16년기준)

□ 또한, 국제기구(IMF 등)에서 우리나라의 재보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을 경우, 국내 보험회사 영업에도 차질 우려

-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자국의 보험회사에 대해 재보험감독 체계 등이 자국 수준의 성숙도를 갖춘 경우에만 자국 보험회사와 국경간(Cross-boarder) 재보험계약 등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하고 있음(규제 동등성 원칙)
- 이에 따라 '19년 예정된 IMF의 금융안정성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국내 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 등 안정적 영

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 모범규준 폐지로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해외출재를 억제하거나, 자율적인 규제를 수행토록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가 재보험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권고 수준의 최소한의 감독기준을 명문화할 필요

* 다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사의 자율성을 보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험업계	'16.8월부터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	이견없음

3. 규제목표

☐ 국제수준을 고려하여 재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요건을 필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규제체계는 선진화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해외진출 경쟁력을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기존에도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을 통해 규율하던 최소한의 재보험 관리 기준을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화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편익이 우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주요국들은 대체로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에서 국제기관에서 권고한 사항(ICP 13) 등 재보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국 가	규정 체계
미국 (뉴욕)	뉴욕주 제규정(NY Codes, Rules and Regulation)의 '재보험 신용 위험의 신중한 관리에 관한 원칙' 부문에서 규정
EU	EU 감독지침(Directive)의 감독체계, 리스크관리 등 부문에 산재
일본	보험회사 대상 종합적 감독지침(保險會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의 '재보험에 관한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규정
중국	손해보험회사 재보험 관리규범(財産保險公司再保險管理規範)라는 별도 재보험 규정 운영
영국	영국 건전성감독기구 규정집(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RULEBOOK)의 사업계획, 위험관리 등 부문에 산재
싱가포르	감독지침(MAS notice) 114 재보험관리라는 별도 지침 운영
호주	재보험 관리규정(Prudential Standard GPS 230, Reinsurance Management)에서 규정

○ 타법사례

보험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규제로서 다른 금융업법 등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기존에도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을 통해 규율하던 최소한의 재보험 관리기준을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화하는 것이므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업무에 대해 재보험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함께 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업무에 대해 재보험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함께 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6.8월부터 해외사례 등 자료수집 및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 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마련된 보험업감독규정 정비방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지속적인 감독검사를 통하여 재보험 관리 규정 준수여부에 대하여 관리

3. 종합결론

- 기존에 모범규준으로 규율하던 재보험 전략 수립의무 부여, 문서화, 내부 통제체계 구축운영 등 위험관리 요건을 국제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 수준으로 도입하고 규정화함으로써 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보험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해외진출 경쟁력을 확보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0
	간접		492,207	-492,207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0	492,207	-492,207
기업순비용		0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설명	현 시점에도 보험회사는 이사회 조직 등을 통해 재보험 위험관리 필요기준 등을 수립·운영중
세분류	손해보험회사
활동제목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활동비용 특성	
산식	0
근거설명	보험회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보험 위험관리 필요기준 등을 감독규정에서 의무화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 편익 :

(정량)제목	재보험 관리 규정화를 통한 보험사고 철저 예방
금액	4,922억원
산식	재보험 위험관리 규정화를 통해 재보험 관련 사고금액* 절감 기대 * 10년간 매년 653억원[= 과거 사고 손실금액(6,042억원 + 484억원)/10]
근거설명	1) 그간 재보험 관련 실무지침으로 기능하던 「재보험관리 모범기준」이 폐기('15.12월)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보험 업무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 발생 - 재보험 관리 규정화를 통해 향후 보험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 2) 최근 10년 이내 재보험 사고는 2건* 발생하였으며, 총 최종 손실액은 6,526억원 - 이를 10년간 평균금액으로 안분하여 매년 653억원이 발생한다고

	<p>가정하고, 향후 이에 대한 사고예방으로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p> <p>* ①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 부실 발생('12.8월말 기준, 6,042억원 손실)</p> <p>② 휴대폰 재보험금 회수불능 사태('14.5월말 기준, 484억원 손실)</p>
--	---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

(정성)제목	보험사고 및 이에 따른 보험사 파산 가능성 감소로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
분석	
근거설명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 저하로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 기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의2 제5항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제3호,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보험계약자 등의 과다 출재 요구(90~100%)로 원보험사의 사업비 충당도 어려운 수준의 프론틱 계약사례 빈번</p> <p>국내보험사가 원수보험 인수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계약자 요구에 따라 정상적인 위험평가 없이 보험인수 후 출재함에 따라 언더라이팅 기능 및 출재의 부실화 우려</p> <p>보험계약자의 불합리한 과다 출재요구 관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재보험 계약자 간 공정한 협상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최소 보유비율 도입을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화</p>		
	7.규제내용	국내 손해보험사의 기업성 보험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등을 위해 일반손해보험 '개별 계약'의 최소보유비율(10%) 도입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		
	9.규제목표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의 10%를 최소 보유토록 규정 하여, 프론틱 계약 등 불합리한 출재 관행 개선 및 인수업무 (언더라이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2조의2(재보험의 관리) ①~④ (생략) ⑤ < 신 설 >	제7-12조의2(재보험의 관리) ①~④ (생략) ⑤ <u>보험회사는 보험위험의 인수 및 보유에 따른 비용 등 합리적인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개별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 계약별로 각 보험회사가 인수한 원수보험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u> <u>1. 위험관리위원회가 보험계약의 특수성, 위험분석, 회사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수보험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정하는 경우</u> <u>2. 재보험 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당해 재보험 계약에 대해 다시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보험계약자 등의 **과다 출재 요구(90~100%)**로 원보험사의 사업비 부담도 어려운 수준의 **프론팅*** 계약사례 빈번

* 국내에서 영업 중인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또는 지점 등(보험계약자)이 본사의 글로벌 출재전략에 따라 특정 외국 재보험사에 대부분 출재할 것을 조건으로 국내 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지칭

- 프론팅 계약은 사실상 외국재보험사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효과가 있어 각국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업계 건의사항** : 일부 보험사는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을 통해 보험계약자 측의 무리한 출재요구 관행 등을 들어, 보험감독규정에 보험사업자의 최소 보유의무비율 신설을 건의

- 국내보험사가 원수보험 인수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계약자 요구에 따라 정상적인 위험평가 없이 보험인수 후 출재함에 따라 언더라이팅 기능 및 출재의 부실화 우려

- 과도한 해외출재의 원인이 되어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에도 기여

* '07~'16 기간 중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누적)는 △3조 4,156억원

-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불합리한 과다 출재요구 관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재보험 계약자 간 공정한 협상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최소 보유비율 도입을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유지안 : 건전성 감독 외 별도의 의무보유규제 미도입 >

- 현행 보험법규는 보험회사의 최대 출제한도 또는 최소 보유의무 비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지급여력비율(RBC)을 통해 관련 리스크 등을 포괄하여 재무건전성을 감독

- 프론팅 계약과 같이 원수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무리한 출제 등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공정한 협상력을 보장하는 규제수단 부재
- 미국, 호주 등 주요국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회사의 기능 상실 등을 대비하여 최소한의 의무보유비율을 운영중이나, 국내 법규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미비

보험계약 보유 관련 주요국 법규 현황

국가	법규명	규정내용
미국	뉴욕 보험업법	감독당국의 허가 없이 연간 미경과보험료의 50% 이상 출제 금지
호주	손해보험규정	연간 총수입보험료의 60% 이상 출제 금지(수재 보험사의 최저 신용등급 A- 지정)

- 국내 손해보험사는 해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장기(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기(저축성) 보험을 제외하고 볼 경우,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고 무분별한 재보험 출제가 관행화
 -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장기(저축성)보험 영업에 과도하게 몰두하면서 손해보험 고유의 위험평가 및 언더라이팅 역량이 담보
 - * 국내 손해보험사는 저축성 보험(72.0%)과 자동차 보험(22.2%)을 제외하면 순수 보장성 일반보험 비중이 5.7%에 불과('17년, 15개 보험사 보유보험료 기준)
 -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위험(보유율)이 전체 보험계약 위험의 40%미만에 불과하게 나타나는 등 국제기준에 비해서 재보험의 무분별한 출제 관행이 과도한 측면

< 비규제대안 : 자율적 시행 유도 >

□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에 대한 리스크 분석없이 계약인수 후 재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해외 출재 등으로 인해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문제가 장기간 지속

○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위험(보유율)이 전체 보험계약 위험의 40% 미만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자율적 개선에 한계

* 기업성보험(상해보험 제외) 중 재보험 출재 비중 : ('11년)61.7% → ('15)62.7%

< 최근 재보험 해외출재 규모 및 해외수지차 >

(단위 :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외출재액	37,356	39,384	40,584	43,680
해외수지차	△1,574	△2,708	△4,178	△4,188

* 해외수지차 : 재보험료, 재보험금 및 수수료의 수취·지급을 반영한 재보험 해외수지차(收支差)로, 해외 수재수지차와 해외 출재수지차의 합

- (해외)수재수지차 : 재보험료 수입 - 재보험금 지출 - 수재수수료 지출
- (해외)출재수지차 : 재보험금 수입 + 출재수수료 수입 - 재보험료 지출

○ 프론팅 계약과 같이 원수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무리한 출재 등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공정한 협상력을 보장하는 수단이 부재하여, 자율적인 부작용 완화에 한계

* 종목별 보유율(=보유보험료/원수보험료) : (특종)44.9%, (해상)29.5%, (화재)56.5%
(원수보험사가 인수한 보험물건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율, 16년기준)

< 규제대안 :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 >

□ 국내 손해보험사의 기업성 보험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등을 위해 일반 손해보험 '개별 계약'의 최소보유비율(10%) 도입

○ (대상) 자동차, 장기보험은 보유율이 높아* 규제 실익이 없고, 대부분의 프론팅 계약이 일반보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보험'에 대한 핀셋규제 도입

* 자동차보험 위험 보유율 : 95.9%, 장기보험 위험보유율 : 94.8%

- **(보유비율)** 원수보험사의 사업비, 출재수수료율 등을 감안*하고,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10% 의무보유비율 설정

* 원수보험사의 사업비율 : 21.1%

원수보험사의 출재수수료율(재보험 계약 관련 수익[수수료]) : 13.2%

⇒ 원수보험사의 수지차(△7.9%) : 재보험계약 사업비 관련 수익 - 비용

** 원수보험사별로 종목별 보유율이 0.1%p~5.3%p 상승 전망

- **(예외)** 재보험의 경우 또는 원수보험사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각 기업별·보험계약별 특성(예 : 거대위험 계약)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10%미만 보유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0% 미만 보유하는 계약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

<선택근거>

□ 글로벌 보험계약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출재를 요구하는 프론틱 계약 등을 해소하고,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에 최소 보유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 해외 주요국의 경우 보험회사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보험계약 보유규제를 운영하고 있어, 재보험 계약의 국제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도 동 규제를 도입할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험업계	'16.8월부터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	이견없음

3. 규제목표

- 우리 손해보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
 - 손해보험의 다양한 위험보장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질적 고도화
 - 진입규제 개편이 궁극적으로 혁신도전자 출현으로 연결되도록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지대추구적 영업 관행을 과감히 타파
 - 손해보험 혁신을 위해 보험 전문인력 확충 등 정부차원의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
-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의 10%를 최소 보유토록 규정하여, 프론팅 계약 등 불합리한 출재 관행 개선 및 인수업무(언더라이팅)의 건전한 발전 유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기존에는 RBC비율 산출시 재보험을 통한 보험위험액 감소효과를 일부 인정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했었으나, 금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최소 보유의무를 명시하여 과도한 재보험출제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편익이 우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프론틱 계약 등 과다 출재를 방지하기 위해 총 보험료 대비 최대 출재수준을 설정하여 재보험거래의 안전성을 제고

보험계약 보유 관련 주요국 법규 현황

국 가	법규명	규정내용
미국	뉴욕 보험업법	감독당국의 허가 없이 연간 미경과보험료의 50% 이상 출재 금지
호주	손해보험모범규정	연간 총수입보험료의 60% 이상 출재 금지(수재 보험사의 최저 신용등급 A- 지정)

※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 재보험산업 육성을 위해 최소 국내 보유의무비율을 설정하거나 국영 재보험사에 일부 비율을 의무출재토록 하고 있음

○ 타법사례

보험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규제로서 다른 금융업법 등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외출재가 빈번하고 프론팅 계약이 집중되는 일반보험에 대한 편셋 감독 방식이며, 보험계약별 특수성, 회사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업무에 대해 재보험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함께 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업무에 대해 재보험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함께 감독하고 있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6.8월부터 해외사례 등 자료수집 및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 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마련된 보험업감독규정 정비방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완료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지속적인 감독검사를 통하여 재보험 관리 규정 준수여부에 대하여 관리

3. 종합결론

- 손보사가 기업에게 인수한 보험위험은 일정비율(보험료의 10%) 이상 보유하도록 하여 손보사의 보험위험 관리 역량 강화, 재보험 해외수지 역조 개선, 국제 정합성 제고 목적 등을 달성할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371	43,643	-39,27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4,371	43,643	-39,272
기업순비용		4,371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10%) 준수
설명	손해보험사가 최소보유비율(10%) 준수를 위해 보유 확대

세분류	손해보험사																																							
활동제목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10%) 준수																																							
비용항목	기타																																							
비용	43.71억원																																							
활동비용 특성																																								
산식	기존 해외로 출재하던 계약을 보유로 전환함에 따라 출재시 수취하던 출재수수료수입* 감소(매년 5.8억원 발생) [기회이익 상실] * 원수보험사가 사업비 보전 및 실적 공유 목적으로 재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수입																																							
근거설명	1) 규제 비용·편익 산출시 가정																																							
	- 보유율 0%(출재율 100%) 프론틱 계약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정량적인 비용·편익 분석 실시																																							
	* 프론틱 계약 : 보험계약의 대부분(80% 이상)을 특정 외국 재보험사에 출재할 것을 조건으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 전체 프론틱 계약 중 보유율 0% 계약이 가장 큰 비중(40.5%)																																							
	프론틱 계약 규모 및 분포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건, 억원, %)																																							
	<table><tr><th>보유율</th><th>0%</th><th>0% 초과 1% 미만</th><th>1% 이상 2% 미만</th><th>2% 이상 4% 미만</th><th>4% 이상 5% 미만</th><th>5% 이상 10% 미만</th><th>10% 이상 20% 미만</th><th>20%</th><th>합계</th></tr><tr><td>건수</td><td>1,376</td><td>80</td><td>64</td><td>42</td><td>185</td><td>664</td><td>1,043</td><td>222</td><td>3,676</td></tr><tr><td>금액</td><td>579</td><td>134</td><td>35</td><td>29</td><td>33</td><td>191</td><td>413</td><td>14</td><td>1,428</td></tr><tr><td>(비중)</td><td>(40.5)</td><td>(9.4)</td><td>(2.5)</td><td>(2.0)</td><td>(2.3)</td><td>(13.4)</td><td>(28.9)</td><td>(1.0)</td><td>(100.0)</td></tr></table>	보유율	0%	0% 초과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합계	건수	1,376	80	64	42	185	664	1,043	222	3,676	금액	579	134	35	29	33	191	413	14	1,428	(비중)	(40.5)	(9.4)	(2.5)	(2.0)	(2.3)	(13.4)	(28.9)	(1.0)
보유율	0%	0% 초과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합계																															
건수	1,376	80	64	42	185	664	1,043	222	3,676																															
금액	579	134	35	29	33	191	413	14	1,428																															
(비중)	(40.5)	(9.4)	(2.5)	(2.0)	(2.3)	(13.4)	(28.9)	(1.0)	(100.0)																															
- 최소보유비율(10%) 도입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재보험 출재가 제한 (보험계약 보유 확대)될 경우 발생하는 출재수수료수입(기회이익)의 상실을 비용으로, 출재보험료비용(기회비용)의 감소를 편익으로 판단																																								
2) 2016년중 원수보험사의 보유율 0%(출재율 100%) 프론틱 계약의 총 출재수수료수입은 58억원. 동 계약의 보유비율을 10%로 확대 (출재율 90%)시 출재수수료수입이 10% 감소(↓5.8억원)할 것으로 예상																																								

	3) 예상되는 5.8억원 출재수수료수입 감소는 프론팅 보험계약의 보유 확대(출재 감소)에 따른 이익의 상실로, 최소보유비율(10%) 규제비용으로 추산
--	---

□ 편익 :

(정성)제목	손해보험사 일반보험 언더라이팅 역량 제고 등을 통한 보험산업 발전
분석	
근거설명	국내 보험회사가 우량한 기업성 일반보험계약을 일정부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언더라이팅(인수) 역량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제고되어 중장기 보험산업 발전이 기대됨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

(정량)제목	재보험 해외출재보험료 및 해외수지차 적자 규모 축소
금액	436.42억원
산식	기존 해외로 출재하던 계약을 보유로 전환함에 따라 출재시 발생하는 해외출재보험료(비용) 감소(매년 57.9억원 발생) [⇒ 이에 따른 해외수지차 적자 규모 감소 기대]
근거설명	<p>1) 규제 비용·편익 산출시 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율 0%(출재율 100%) 프론팅 계약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정량적인 비용·편익 분석 실시 - 최소보유비율(10%) 도입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가 제한(보험계약 보유 확대)될 경우 발생하는 출재수수료수입(기회이익)의 상실을 비용으로, 출재보험료비용(기회비용)의 감소를 편익으로 판단 <p>2) 2016년중 원수보험사의 보유율 0%(출재율 100%) 프론팅 계약 해외출재 보험료(비용)는 579억원. 동 계약의 보유비율을 10%로 확대(출재율 90%)시 해외출재보험료(비용)가 10% 감소(↓57.9억원)할 것으로 예상</p> <p>3) 예상되는 57.9억원 해외출재보험료 감소는 프론팅 보험계약 보유 확대(출재 감소)에 따른 비용의 감소로, 최소보유비율(10%) 규제의 편익으로 추산</p> <p>※ 한편, 해외수지차 적자는 출재수수료수입 감소(↓5.8억원) 및</p>

출재보험료비용 감소(↓ △57.9억원)에 따라 총 △52.1억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해외수지차 : 재보험료, 재보험금 및 수수료의 수취·지급을 반영한 재보험 해외 수지차(收支差)로, 해외 수재수지차와 해외 출재수지차의 합

- (해외)수재수지차 : 수재보험료 수입 - 수재보험금 지출 - 수재수수료 지출
- (해외)출재수지차 : 출재보험금 수입 + 출재수수료 수입 - 출재보험료 지출

최근 재보험 해외출재 규모 및 해외수지차

(단위 :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 외출재액	37,356	39,384	40,584	43,680
해 외수지차	△ 1,574	△ 2,708	△ 4,178	△ 4,188

4) 최소보유비율(10%) 도입시 보유율 0%~10% 프론팅 계약에서도 상기와 유사하게 규제 비용·편익 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동 규제 도입의 순편익이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 통계분석결과 공시의무 및 보험정보 제공시 개인신용정보 동의여부 확인의무 마련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의4제1항, 제3항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76조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기업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기업성보험 통계를 집적·분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보험회사에 기업성보험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에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명문화 할 필요		
	7.규제내용	보험요율산출기관에 대하여 집적된 기업성보험통계의 분석 보고서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보유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함		
	8. 피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9.규제목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기업성보험 관련 통계를 집적·분석 하고 분석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여 기업성 보험의 통계를 충실히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 또한, 기업성보험 관련 통계를 보험사에 제공시 개인신용 정보가 포함된 경우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신용정보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 물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원 칙 허 용 · 예 외 금 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제9-5조의4(기업성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p>
<p>< 신 설 ></p>	<p>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176조 제5항 및 제7-79의3제1항에 따라 집적한 보험요율 및 경험실적 등 보험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기업성 보험의 손해율 등 사고발생 위험에 관한 보고서(이하 “기업성 보험 통계 분석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매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p>
<p>< 신 설 ></p>	<p>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기업성 보험의 순보험료 산출 및 제7-79조의3제2항에 따른 내부통기준 마련을 위해서 제1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 관련 통계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통계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기업성 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p>
<p>< 신 설 ></p>	<p>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정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제9-5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보험사의 기업성보험 가격산출 및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기업성보험 통계를 집적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매년 공시하도록 의무화
- ☐ 또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집적한 기업성보험 통계를 보험회사에 제공함에 있어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의무를 명확화
- ☐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에 대해 상위법령 광범위하게 적시된 업무 근거 및 관련 절차를 감독규정에 명확히 명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유지안 : 일반적인 영업기준 적용 >

- ☐ 기업성보험은 계약별·보장위험특성별로 사고발생 위험이 동질적이지 않고 사고발생 빈도 등도 적은 경우가 많아서 개별 보험사의 통계로는 적정 보험료 산출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이에 따라 보험회사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비통계요율(통계 및 산출 방법 등을 검증 불가) 사용하는데 의존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전 보험회사의 기업성보험 통계를 집적하고 이를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보험료 산출 역량이 도태되고, 현행과 같이 재보험에 과도하게 의존할 우려

< 비규제대안 : 자율적 시행 유도 >

- ☐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업무의 내용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법규에 명시할 필요

- 또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 통계 분석의무를 법규상 명문화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및 보험료 산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속도감있게 확충할 필요

〈 규제대안 :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 통계분석결과 공시의무 및 보험정보 제공시 개인신용정보 동의여부 확인의무 마련 〉

- 보험요율산출기관에 대하여 집적된 기업성보험통계의 분석보고서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집적된 통계를 보험료 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보험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 강화
- 아울러, 기업성보험 통계를 보험회사에 제공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화

〈선택근거〉

- 전 보험회사의 기업성보험 통계를 집적하고 이를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보험료 산출 없이 현행과 같이 재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
- 개별 보험회사는 독자적인 통계의 부족 등으로 보험료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여 기업성보험 관련 정보공유 인프라를 마련하고
-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위험보장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험업계	'18.상반기부터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	이건없음

3. 규제목표

- ☐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기업성보험 관련 통계를 집적·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여 기업성보험의 통계를 충실히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
- ☐ 기업성보험 관련 통계를 보험사에 제공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충실한 보호를 도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기업성보험 인프라 확대 및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업성보험 보험료 산출능력 배양 등을 위해 정보가 집적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 통계분석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그 편익이 우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국제기준	일몰설정	원칙허용·
기술	경쟁	중기	규제설계	정합성	여부	예외금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미국 보험요율산출기관인 ISO 등은 개별 기업성 보험의 손해율, 건축물 기본정보, 화재 등 사고이력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유료로 제공

○ 타법사례

보험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규제로서 다른 금융업법 등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집적한 기업성보험통계를 분석하고 공시하는 내용 및 정보제공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규제 준수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도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기업성보험의 통계를 집적하고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바, 규제내용은 분석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여부의 확인은 현재도 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도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는 기업성보험의 통계를 집적하고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바 규제내용은 분석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여부의 확인은 현재도 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18.상반기부터 금융당국, 보험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

2. 향후 평가계획

- ☐ 향후 지속적인 감독검사를 통하여 분석결과 홈페이지 공시의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시 동의여부 확인의무 준수여부에 대하여 관리

3. 종합결론

- ☐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기업성보험 관련 통계를 집적·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여 기업성보험의 통계를 충실히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 또한, 기업성보험 관련 통계를 보험사에 제공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신용정보를 충실히 보호할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20,940	-20,94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0	20,940	-20,940
기업순비용		-20,940	연간균등순비용	-20,940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일반적인 영업기준 적용>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기업성보험 통계 분석보고서 매년 홈페이지 공시, 보험회사에 기업성보험 통계 제공시 개인신용정보 포함여부 및 동의여부 확인
설명	
세분류	보험요율산출기관
활동제목	기업성보험 통계 분석보고서 매년 홈페이지 공시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활동비용 특성	일시적
산식	-
근거설명	보험개발원에서 현재 기업성보험 통계를 집적하고 있으며 내부 적으로 통계분석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바, 신설규제로 인하여 추 가되는 업무는 분석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음 또한, 보험회사에 보험통계 제공시 개인신용정보의 포함여부 및 동의여부 확인은 현재 수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 음

☐ 직접편익 :

(정량)제목	기업성보험 보험료산출 역량 강화에 따른 해외 재보험 출재 수지차 개선으로 보험영업이익 증가
금액	20,940,000,000
산식	$209,400,000,000 \times 10\%$
근거설명	1) 2017년 기준 기업성보험의 해외 출재 수지차*는 약 -2,094억원 으로 추정** * 해외 출재 수지차 : 해외 재보험 출재로 인한 수입보험료, 수입 수수료에서 출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p> ** 전체 손해보험의 국내·해외 출재규모 대비 기업성보험(재산종합보험)의 국내·해외 출재규모 비중이 전체 손해보험의 해외 출재규모 대비 기업성보험(재산종합보험)의 해외 출재규모 비중과 유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p> <p> 2)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 통계 분석보고서 홈페이지 공시로 인하여 손해보험사의 기업성보험 보험료 산출역량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해외 재보험 출재규모가 10% 감소(보험사의 기업성보험 자체보유비중 증가)함을 가정 </p> <p> 3) 따라서, 현재 기업성보험의 해외 출재로 인한 수지차가 연간 약 -2,094억원 수준이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 통계 분석보고서 공시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업성보험 보험료 산출역량이 강화되어 해외 출재 규모가 10% 감소할 경우 해외 출재로 인한 수지차는 209.4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 </p> <p> 4) 해외 출재 수지차 개선은 보험사의 보험영업이익 증가로 나타나며, 보험영업이익 증가는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여력 확대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p>
--	--